

전남도, 조선해양 분야 핵심기술 개발 추진 ‘주목’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생산·제조 협약
개발→실증→양산→상용화 등 전주기 체계 완성

전남도가 조선해양 분야의 핵심 기술인 극저온 단열시스템 생산·제조 기반을 구축하며,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일 목포대학교에서 대학·연구기관·기업 등과 함께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생산·제조 기반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우승희 영암군수, 송하철 목포대 총장, 김진을 제일테크노스 연구소장, 최대규·우명수 KCC 상무, 김홍배 대웅엔지니어링 상무, 김만태 한국세라믹기술원 단장, 조원제 TMC 상무, 심학부 HD현대상호 전무, 오훈규 HD현대중공업 수석실장, 방창선 삼성중공업 상무, 강중규 한화오션 전무, 이상철 대한조선 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극저온 단열시스템은 LNG·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안정적으로 저장·운용

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조선산업의 탄소 중립 전환과 재생에너지100(RE100) 실현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LNG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의 국산화와 생산 생태계 확립을 목표로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교류 등에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실증→양산→상용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미 지난해 대불국가산단 내에 한국형 화물창의 성능평가를 위한 실증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기업에는 차세대 화물창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소재·부품 양산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지역산업 기반의 기술 자립을 견인할 방침이다.

또한 목포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협약에 참여한 기업·기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LNG 화물창 기반 구축



전남도는 최근 목포대학교에서 대학·연구기관·기업 등과 함께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생산·제조 기반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추진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한국형 화물창 모델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세계 친환경 선박시장

에서 기술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

약은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향로를 여는 출발점”이라며 “전남이 한국형 화물창 국산화의 중

심 거점이 되도록 대학·연구기관·기업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당정, 지역의사제 도입...비대면 진료 제도화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립대병원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주요 보건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역 필수 공공 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거국회 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지역,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써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을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



김민석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 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표’(2035 NDC)를 이같이 정하는 데 공감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당정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시장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확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정치권 공방 격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 내부는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지휘 부를 향한 반발이 일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속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항소 포기 결정을 공식화했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며 “판결 취지와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5명의 1심 판결에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 재판에서는 1심 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검찰이 추진한 수천억 원대 배임 액수 추징도 불가능하게 됐다.

당초 중앙지검과 대검 지휘부는 항소 제기 방침을 세웠지만 법무부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고 반발하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인 지난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여야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이틀째 강하게 충돌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정부 분담 올려야”

광주상의, 대통령실 등 건의문...정책 변화 반영 촉구

광주상공회의소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C 확장공사의 지방비 부담 해소를 위한 재정 분담 비율 조정 촉구에 나섰다.

9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건의문을 전달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C 구간은 1986년 4차로로 확장된 이후 하루 약 14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이는 적정 통행량인 5만 1300대의 2.7배에 달한다.

국가 물류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재정 부담 구조가 중앙정부 20%, 한국도로공사 30%, 광주시 50%로 돼 있어 지방정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광주상의는 지적했다.

또 총사업비는 2015년 사업계획 당시 2762억원 규모에서 2023년 실시설계 결과 7934억원으로 약 5100억원 증가했다. 광주상의는 이러한 증액과 관련해 단순한 물가 상승분을 넘어 정부의 환경·안

전 정책 강화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로 분석했다.

광주상의는 2021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소음저감 대책이 강화됐고 2022년 제2경인민자도로 방음터널 화재 이후 방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방음터널, 방재설비 등 추가 공사비가 대폭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사업비 증액에 대해 지방정부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C 확장공사는 단순히 한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물류체계의 효율화와 국민 교통안전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사업”이라며 “국가정책 변화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방정부가 절반 부담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연구원-한국과총 광주·전남지역연합회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공동 대응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이 에너지 수도 전남에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과학기술 발전의 요람인 (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광주·전남지역연합회(회장 방상원)과 손을 잡았다.

전남연구원과 한국과총 광주·전남지역연합회는 지난 7일 전남연구원 최상준총에서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영선 전남연구원장과 방상원 한국과총 광주·전남지역연합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교류 활동 및 공동연구 개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및 관련 정책 지원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전문인력 및 정보 교류 등이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전남 나주는 화강암 기반의 안정적 부지와 더불어, 한국 에너지 공과 대학교(KENTECH), 한전 및 670여개의 전력·에너지 기업이 모여 있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의 최적지”라며 “앞으로도 한국과총 광주전남지역연합회와 지역 과학기술 생태계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정책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광주 군공항’서 계속

하지만 6자 TF가 출범한다고 해도 이제 당사자 간 입장 차가 커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6자가 대통령실 주도로 회의에는 참석하지만 조금만 수가 틀리면 반발해 TF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새로운 이전 부지를 마련해 군 공항을 건설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해 그 개발이익으로 이전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등의 과정을

이르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5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 의원은 이날 “지난 6월 말 TF가 구성된 이후 아직 한 차례도 공식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구체적 진척 상황에 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지부진함을 지적하며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진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은 낙후된 서남권의 미래 성장 축을 여는 핵심 과제이자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1면 ‘KTX 산천’서 계속

경부선은 좌석 955석의 대형 KTX-1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호남선은 379석 규모의 KTX-산천이 절반 이상이다. 최신헌 ‘청룡열차’도 주중 하루 1대만 투입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같은 차별을 해소 대안으로 단기적으로 주말·명절·피크시간대에 좌석이 많은 KTX-1을 우선 투입하거나, KTX-산천 2대를 연결한 중련열차(758석)를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수요가 적은 서대전 경유 열차를 호남고속 열차로 대체 투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앙지적으로는 2028년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완료 시점에 맞춰 하루 16회 이상 선로 용량을 추가 확보하고, 신규 도입되는 KTX-청룡 차량을 호남선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증편은 이러한 지역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되는 한편, 산천형 고속철도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호남선이 국가 균형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전남의 이동길을 더 넓히고 더 편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